尹, 9월 정상회담 30차례…북핵 공조에 엑스포 유치활동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다자회의 계기 릴레이 회담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 외교 강화 엑스포 투표 두 달 앞두고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연달아 참여하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최소 30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 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국제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강화하 는 동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달에만 30여 회에 달하는 양자 회담을 한다"며 "현재 조율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5\sim11$ 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도중 1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 기간 아세안+3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제도,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의 정상들과 틈틈이 회담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

서 "아세안 계기에 캐나다, 라오스와, G20 정상회의 계기에 방글라데시, 코모로와 각각 양자 회담이추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순방 계기에 열릴 양자회담 일정은 현 재까지 14개"라며 "현재 약 6개 국가와 추가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회담을 조율 중인 6개국 중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 때마다 시간을 쪼개 외국 정상들과 교류해왔다. 특히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 스에서는 이틀 만에 13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다자회의 참여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만 50차례 이상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 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릴레이 양자 회담에서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11월 28일)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엑스 포 유치전뿐 아니라 (회담 상대국들과) 올해와 내 년 이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양자관계를 맺어갈 것 인지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대책 마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검찰 "이재명 2차례 소환 불응 유감"

"단식으로 조사 지장 초래"

"국회 일정 등 검토해 절차 진행"

검찰이 4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 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 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 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 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검찰 간 소환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조사가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달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 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 나, 이 대표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 러 가겠다"고 하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 을 보였고, 결국 8월 30일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검찰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sim15$ 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엔 이 대표가 돌연 "4일 오전에만 조사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동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

"방송통신 심의 엄중 조치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 련 질의에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 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 당 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

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 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 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 터뷰를 했다.

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5.4%…2.2%P 하락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1.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 ~이달 1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 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한 주 만에 소폭 반 등(35.6%→37.6%)했다가 다시 한 주 만에 하락 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오른 61.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59.4%로 떨어졌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권역별로살펴보면 광주·전라($6.4\%p\downarrow$), 대전·세종·충청($6.1\%p\downarrow$), 서울($3.3\%p\downarrow$), 대구·경북($2.3\%p\downarrow$), 부산·울산·경남($2.0\%p\downarrow$)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인천·경기($2.0\%p\uparrow$)는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9.8%p↓), 60대 (2.7%p↓), 30대(1.7%p↓) 등에서 내렸고 40 대(1.4%p↑)는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오광록기자 kroh@

